

AI 중심도시 · 국립의대 설립...광주·전남, 대선 공약 제안

광주 5·18정신 헌법수록 등 15대 과제·40개 사업
전남 AI슈퍼클러스터·호남권 메가시티 등 75건 발굴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8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건의할 공약 사항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수록과 AI 선도도시 도약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광주 발전 공약을 제안했다.

광주시 대선공약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인공지능, 문화 발전 등으로 축약된다.

우선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설립과 274개 인공지능 기업과 투자협약, 1만1362명의 인공지능(AI) 인재를 배출한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가 돈이 되고 경제가 되는 '인공지능 모델시티-더 브레인(The BRAIN)' 광주 조성'을 공약에 포함했다.

또 세계 인공지능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속도' '집적'이 승리의 요소라 판단하고 차세대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최소 10만장 이상 GPU가 집적된 초거대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조기 구축하고 인공지능전환(AI) 실증벨트 사업(AI 2단계) 추진을 구상했다.

아울러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300만평 일원에 인공지능이 융합된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 기업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넷제로(Net-Zero) 분산에너지 허브 단지 조성' '분산에

너지 실증단지 조성' '배터리 모듈·시스템 특화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비엔날레의 도시, 노벨상의 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도 공약으로 발굴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 신설과 함께 올해로 개관 10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발전소'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 융합 콘텐츠문화기술(CT)연구센터 등의 설립 계획을 세웠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등 3대 국립 문화시설 구축과 함께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으로 조성(송암산단 일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O) 사관학교를 문화 전문 공유대학으로 확장, 5·18구역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국정 과제로 반영해야 할 정책공약으로는 민·군 통합공항 조성 및 마북동 탄약고 이전 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군사시설 이전기구 설치'와 광주·전남·전북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전남도는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로벌 관광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영·호남 공약으로는 광주선 도심 구간 지하화를 포함한 달빛철도 신속한 추진과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고흥~광주~전주~세종 고속도로 건설, 광주 외곽순환도로 완성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전남도도 이날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시킬 공약으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 75건을 발표했다.

전남도가 제시한 대선 공약과제는

핵심과제 20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제도 개선과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모두 75건이다. 예산 소요사업비는 191조9112억원으로, 국비가 105조9077억원, 지방비가 3조3683억원, 민간자본이 82조6352억원 등이다.

제1호 공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전남 국립 의대 설립으로 정했다. 이어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가 2, 3호 공약으로 분류됐다.

AI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와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전남 미래발전을 이끌 신성장프로젝트와 초광역 SOC, 농업, 관광·문화 등을 망라한 최우선 과제도 포함됐다.

신성장 동력 분야로 미래항공모빌리티 연계 남부권 초광역 항공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으며, 미래 농업 분야에는 K-wind(전통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시됐다.

국제공항 수준의 항행안전시설·활주로 구축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

해 국가 출생기본수당 신설, 농어민 공의수당 국가 정책화, 인구소멸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전남형 만원주택 전국 확대 등 제도 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를 건의했다.

윤진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과 여건을 토대로 AI 등 급변하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전남발전에 꼭 필요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균형있게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를 상대로 공약과제를 건의하고,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김 호 기자

6월3일 ‘장미대선’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서 의결...정부 “공정·투명 선거 관리 최선”

정부가 8일 ‘장미 대선’으로 불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심의·의

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

을 맞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기준일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으로, 오는 5월 10~11일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

이날 한 대행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인 대통령 궐위 상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례 없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대통령전 수입금지 해제 주력	2면
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3면
은행, 강통 대출 4조 돌파	4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업,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업,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

건설 폐기물 처리 전문 광성환경

합리적인 가격! 깔끔한 마무리! 빠른 처리속도!



공장 외부



공장 내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운반

철거 공사



환경을 생각하는
GS 유한회사 광성환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평리 969-5 문의전화. 061-537-4775